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공동계정을 통한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방안

- 한나라당은 부실 저축은행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 설치방안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검토하기로 결정함.
 - 한나라당은 9일 금융위와의 당정회의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공동계정 설치에 합의했으나 보완적으로 금융위가 저축은행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.
- 금융위는 공동계정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권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공동대응토록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월중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함.
 - 금융기관의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자 G20 합의사항이라며 공동계정 설치의 필연성을 추가적으로 설명함.
 -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기관 공동계정을 설치하여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저축은행 추가부실 규모를 단정하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법안이 개정되면 10조원의 자원 확보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함.
-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이 더욱 중요한 이슈임이 지적됨.
 - 일부의원들은 공동계정 설치방안은 다른 금융기관이 부실에 대한 부담을 떠안는 임기응변 대책에 불과하며 향후 불분명한 책임의 소재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의사를 피력함.
 - 논의를 통하여 제시된 보완적 조치사항에는 저축은행 부실현황 자료제출, 저축은행 회생방안 마련,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의 상생기반 확보,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저축은행의 워크아웃채권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.
 - 금융위는 공동계정 설치안과 더불어 더욱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한나라당에 추가로 제시할 계획임.

(부실저축은행 공동계정 조건부검토, 연합뉴스, 2/9)